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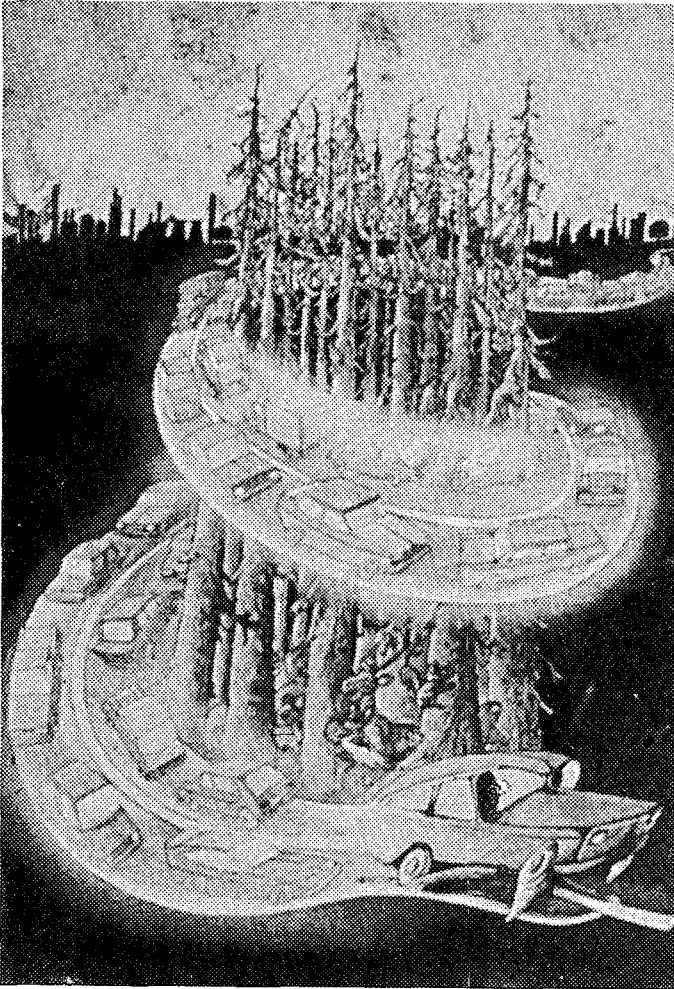
홍민선 /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教授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향후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경제개발의 그늘아래 무시 내지는 간과되었던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만성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원상적로의 복구에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는 예견적으로 착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는 대상영역이 광범위하여 여러 학문의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대처해야 하고 또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정부차원의 계획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환경정책은 첫째로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고 또 협조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뭄에 콩나듯 매스컴에 보도되는 산업재해에 의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을 보는 듯하여 그 밑에 감추어졌을지도 모르는 커다란 피해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줄 뿐이다. 정부산하 및 기타 연구소, 대학에서 측정·예측하는 많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여론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국민 각자가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전통적인 관민사상, 정부의 소극적 계몽, 비공개적 환경정책 그리고 “나 혼자만이 피해자가 아닐 진대” 하는 동류의식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진행된 제 13대 대통령 후보들의 많은 공약중에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공약이 거의 없

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환경문제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곳곳에 세워진 인구 전광판과 같이 현재 호흡하고 있는 대기중에 대기오염물질이 얼마 만큼 함유되어 있고 한계허용치를 넘으면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오염물질 전광판을 곳곳에 세우는 것도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시민의 과반수 정도가 수도물을 끓여 먹고 있다는 일전의 여론 조사 보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과반수 시민이 식수로써 부적당하다고 믿는 물을 공급 받으면서 고작 대장균을 없앨 뿐인, 끓이는 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과 수질검사자료를 통한 식수로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과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문제가 분석자료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표면화 되었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식수문제에 대한 시민과 당국 및 매스컴의 태도는 오염에 의한 피해에 대해 3자의 소극적 대처 방안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민주화 열기에 부응해 민주화로의 첫발을 내딛었듯이 국민 각자의 자각과 공개적인 환경정책이 환경개선으로의 큰 발을 내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환경관련 유관 부처 및 종사자들에게 법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런던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1272년 Sea Cool'을 파는 자에게는 고문을, 태우는 자에게는 교수형에 처하는 법을 통과시킨



〇〇
 환경정책은
 첫째로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고
 또
 협조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은 그 이후 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통해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을 관장하는 부처가 서열 2위인 영국에 반해 아직 청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보면 타 부처와의 마찰에서 양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타 경제활동의 성과를 상쇄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경업무의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들면, 특정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배출규제 및 환경기술의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업체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업체의 이윤을 상쇄시키는 제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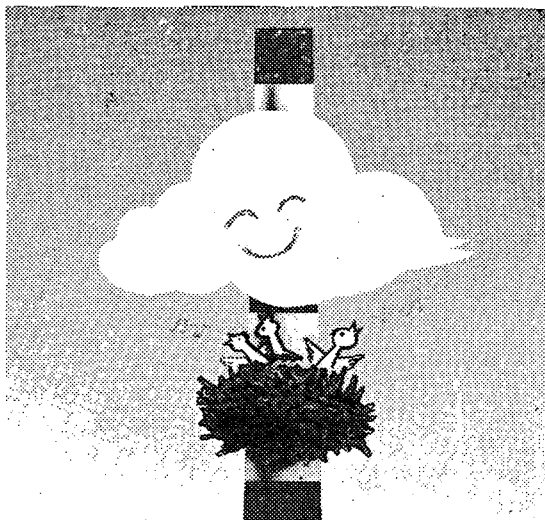
무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환경관련부서 종사자들의 인사권 및 인책권을 해당 업체에서 갖고 있을 경우 종사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방패라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투자자나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법적 의무화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는 자발적 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므로 정부투자자와 오염물질 배출업체로부터의 기금을 특정 연구소 및 대학에 지원해 특정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배출기준을 맞추기 위한 배기정화 시스템을 동시에 연구개발하는 것보다는 A라는 업체는 배기정화 시스템 개발을, B라는 업체는 대기질 환경관리 기술을, C라는 업체는 배기가스가 인체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연구소 및 타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다방면에 걸친 환경기술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자의 경우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간 및 북구 여러나라 간의 산성비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환경관련 연구가 피해를 입기 시작하면서 착수되어 왔던 만큼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일찌기 당한 선진국의 예와 그들의 기술축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가 예천적으로 착수되어야 한다.

대기질 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를 중심으로 Brookhaven National Lab에서는 신



오염물질 및 기존오염물질의 분석기술을, Argonne National Lab에서는 대기물리학에 중점을 둔 기상현상과 그에 따른 오염물질의 생성, 이동 및 소멸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을, Pac

ific Northwest Lab에서는 대류권의 오염물질 측정기술과 대기오염 예측모델의 개발을 미국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하에 십수년째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기타의 연구소 및 대학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공과 한국으로 부터의 대기오염물질 유입을 우려해 1985년 부터 중공과 공동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산림과 호수피해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1982년 부터 OECD 가맹국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환경정책을 통한 여론의 조성과 다방면에 걸친 환경기술의 고른 개발을 위한 각 연구소 및 대학의 특성화, 그리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의 장거리 운송, 오염도 측정, 운송량 계산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 관한 조약(1983년 발효)을 체결하였다.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는 3대 산성우 다발지역(북미 북동부, 유럽북부 및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공의 공업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을 고려해야 하고, 풍하방향의 일본으로부터 손해 배상요구 및 환경 정책 개입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착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환경 정책을 통한 여론의 조성과 다방면에 걸친 환경기술의 고른 개발을 위한 각 연구소 및 대학의 특성화, 그리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환경 관련 정부부처 및 일반업체의 환경유관부서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개선을 위해 시급히 착수되어야 한다. *